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해명자료</h1>	2015. 11. 17(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담당과장 김희순 사무관 김경태 (Tel. 044-200-2429)
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.			

슬그머니 '규제 총량 통계 숫자' 빼버린 정부, 왜? (11.17, 문화일보 6면) 관련 해명

〈 보도내용 〉

-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던 규제건수가 지난 9월 이후 공개되지 않아 규제관리정보를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
 - 임기중 20%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 존재
 - 질적 관리로 변경한다고 해서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

〈 해명내용 〉

- 국무조정실은 등록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기업이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규제등록제도를 개편함
 - 이는 기존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양 중심의 규제의 관리를 질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함임
- 기존 등록제도는 등록단위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등록된 규제 사무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여 전체 규제통계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하였음
 - * 1개 조문을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한 사례와 여러 규제조문을 통합하여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한 사례가 혼재
 - 또한 총 규제수는 규제개혁 노력보다는 오히려 규제등록방식 변경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으며,

- 특히, 규제등록시스템에 부처가 규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할 길이 없었음

*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미등록규제 일제정비 기간에 발굴한 미등록규제는 등록규제수의 30%에 해당하는 4,700여건

- 이에 따라 온전한 규제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였으며, 제공되는 규제정보 역시 다소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낮았음

- 개편된 등록제도는 규제조문단위로 등록함에 따라 일관된 등록이 가능하고,

- 법령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법령 제·개정시 해당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, 미등록규제 및 규제정보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함

- 제공되는 규제정보 역시 법률부터 고시까지의 일련 규제사항은 물론, 일상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생활규제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규제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

※ 등록제도 개편시(15.9) 상기 내용에 대한 출입기자단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

-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등록규제수의 증감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효과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

-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하고, 개선된 사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음

- 참고로 등록규제수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('14.3)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'15년 9월말 기준 14,608개였음